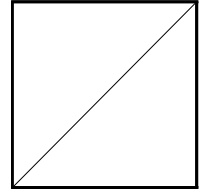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 15. (제 1 차)	

에스엠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 15.

1. 의결주문

에스엠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에스엠신용정보(주)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및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2019. 12. 12.)

<별지1>

에스엠신용정보(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에스엠신용정보(주) 100만원
- 부과사유 :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 법적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및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조치사유

가.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스엠신용정보(주)는 2018. 1. 5. 채권자 ○○○○○○로부터
수임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 □□□에게 2018. 1. 6. 전화로
수임사실통지*를 하지 않음

* 채권수임사실 통지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2018. 1. 8. 이루어짐

(붙임1)

관계법규 등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입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제17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2014.1.14. 개정 이전)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구 분	부과대상	근거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1호	150	300	70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17.10.19. 이후)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 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스엠신용정보(주)
2. 제재조치일 : 2020. 1.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만원 부과
직 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스엠신용정보(주)는 2018. 1. 5. 채권자 ○○○○○○로부터 수임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 □□□에게 2018. 1. 6. 전화로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 채권 수임사실통지를 하지 않음

< 관련규정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이터 정책 과	신용정보평가실
연 락 처	02-2100-2697	02-3145-7844